

출판물 우송료 지나치게 비싸다

배보다 배꼽 더 큰 지경... 발송비 '출혈' 만만찮아

출판물의 성격에 따라 예외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책은 생산자인 출판사가 서점에 내놓으면 이를 필요로 하는 독자들이 직접 구입하는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떤 출판물도 서점판매만으로 전량이 소화되지는 않는다. 서점판매 방식이 아닌 다른 전달체계로도 독자들에게 전해진다는 얘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가 우편으로 책이 유통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전체 생산량 가운데 이렇게 유통되는 물량은 극히 소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다수의 출판사들이 많은 양도 아닌 책을 우편을 이용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통신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사들조차 우편발송비 '출혈'이 만만치 않다는 호소를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한 소규모의 단행본 출판사는 한 달에 평균 3.4종의 신간을 내고 있는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종당 1백권이 넘는다고 한다. 필자증정이나 언론기관 보도용, 그리고 서점 이용이 불편한 지방의 독자들에게 보내지는 이 책들을 우편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책 정가의 20%에 해당된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모든 책의 우송료를 출판사가 부담하고 있는데, 독자관리란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사실 소요경비뿐 아니라 잔손질이 많이 필요해 시간과 인력도 달리고 있다.”

한 편집자의 말대로, 우편발송료는 전부가 출판사의 '차지'가 되며 우편물 사고에 대한 우려나 책임도 전적으로 출판사가 지게 된다. 또한 고작해야 인원이 편집·영업부를 통틀어 대여섯명 정도가 대부분인 출판사에서 수백권의 우편물을 포장하고 주소를 기입·발송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기획에 보다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편집인력들이 단순작업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분실사고 막을 대책도 마련돼야

시간과 인력·경비 소모가 크다는 점 외에도 출판물의 우편발송에는 걸림돌이 많다. 우선 포장규정이 전과 달리 까다로워서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아예 우체국에서 받아주지 않을 뿐더러 다른 우편물에 비해 사고가 많다고 한다. 특히 대학이나 아파트·사무실에 마련된 우편함에 배달된 책은 제주인이 아닌 영동한 주인을 만나기 십상이다. 이렇게 발송한

책이 분실되면 출판사는 이중 삼중의 번거로움과 손해를 본다. 분실된 책값과 우송료를 손해보는 것은 둘째치고 다시 책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출판사들은 책을 발송할 때 보통 우편물로 보내지 않고 등기로 보낸다. 등기로 보내면 우편사고를 당할 위험이 적고 분실된다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출판사는 가뜩이나 비싸다는 생각이 큰 우편료에 등기료를 덧붙여 물어야 한다.

현행 우편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책은 농산물 종자·상품건본·박물학상의 표본과 함께 4종우편물로 분류돼 100g마다 70원씩 추가되는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3종 가급으로 인가받은 월4회 발행의 신문·통신회보 등에 비해 30원이 비싸고, 나급의 월4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보다는 20원이 많은 금액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신문이나 잡지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책은 사실상 추가분의 요금 가중이 심하다고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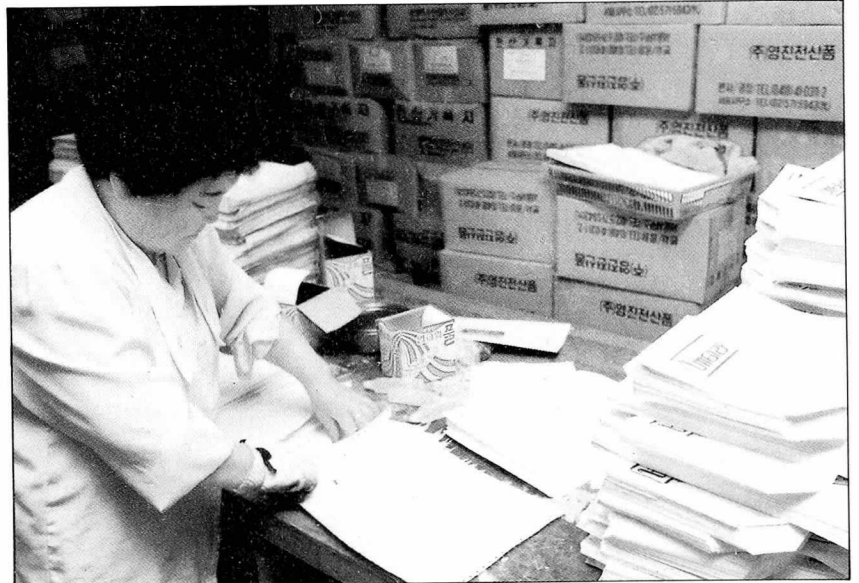
발송작업 역시 불편하다. 정기간행물일 경우엔 요금별납으로 처리돼 일일이 우표를 붙이지 않고서도 발송이 가능한데, 책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발송할 수 없어 일일이 우표를 무게에 맞게 붙여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우편발송량이 많지 않은 일반 출판사와 달리 우편판매에 비중을 둔 출판사에게는 도서의 우편발송료가 짐으로까지 느껴지게 마련이다.

2만에서 2만5천명에 가까운 독사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B사의 경우, 자사의 책을 소개한 도서목록과 사보를 일단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통신판매용으로 지정된 책을 구입하고자 신청한 정기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책을 발송한다. 사보 발송료는 제외하고라도, 한달 평균 50권의 책을 주문받으면 한달에 1천~2백권을 발송하며, 우편료로 60만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야 한다.

“분실사례가 많아져 10권이면 두세권은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전한 담당직원은 “그렇다고 한두권도 아닌 책을 모두 등기로 발송할 순 없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편판매일 때 서점에 주는 마진이 고스란히 출판사에 남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우편료에다 정가의 10~15%씩을 할인하고 나면 출판사의 이윤이 박하기는 마찬가지다.

다른 출판사들보다 우편발송량이 많은 이 출판사가 우편료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도는



책은 수량도 적고 부정기적이라 발송대행업체 이용도 불가능하다.

한가지 있다. 우선 우편번호를 지역별로 잘 분류하고, 서울시내와 지방을 구분해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얼마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책 포장과 주소기입에도 일손이 모자라는 출판사가 이런 작업을 할 여유가 있을리 만무다. 이 출판사가 이렇게 힘들여 발송하는 우편 판매 우송료는 임대료·전화·전기·수도요금 등을 합산한 일반경비비의 약 3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20~30% 저렴해

우편통신판매를 하지 않는 출판사들 중에서 우편발송비가 의외로 지출되는 곳이 있다. 계간지나 월간지 발행을 출판과 함께 병행하는 출판사들이 그 경우에 해당된다.

단행본 출판사로서 중견의 위치에 오른 K사는 문학계간지를 꾸준히 발행하는 출판사로 3.4백면의 계간지를 한권 발행하면 권당 420원 정도의 우편료를 물고 정기독자들에게 우송하는데, 구독자를 8백명만 잡아도 30만원이 넘는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신간 2.3종이 한꺼번에 출판되면 어렵잡아 60만원 이상을 경비로 써야 한다.

“물량이 1천부 이상 되고 정기적인 발행일 때는 발송 대행업체가 봉투작업부터 발송에 이르기까지 작업을 해주지만, 책은 물량도 많지 않고 부정기적이라 일을 맡길 수도 없다”는 것이 담당직원의 설명이다.

책뿐 아니라 출판사가 발행하는 계간지 역시 거의가 1천부 이상을 넘기기 어려워 '짜증내는' 직원들의 수작업에 맡겨야 한다. 이 출판사 역시 배달사고로 인한 피해를 우편발송의 첫

번째 고민으로 꼽는다. 보통 우편물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등기나 속달로 하면 2.3배에 가까운 요금을 더 물어야 하는 고민이 생긴다. 더욱이 등기·속달로 발송했는데,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되돌아오면 반송료까지 꼼짝없이 지불해야 한다.

이상의 불편을 겪는 우리와 외국은 사정이 다르다. 우선 미국의 경우 북 포스트제도가 마련돼 있어 출판사가 서점으로, 서점이 독자에게, 독자가 다시 독자에게 책을 보낼 때 즉 어떤 경우에서도 다른 우편물보다 20~30%의 저렴한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프랑스에서는 책을 넘게 제작된 규격상자가 있어 도서발송의 편리를 제공한다. 물론 외국은 북클럽이 조직돼 회원간 우편판매가 일찍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런 제도적 장치가 배려가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서점판매방식 위주의 도서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출판계도 한시바빠 주문우편판매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단지 우편발송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책은 서점에서 팔리고 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보다 많은 책을 다수의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 때문이다. 또 한가지 바랄 바는 “그래도 우리나라 우편요금은 외국에 비해 싸다”는 말의 되풀이보다, 책을 읽는 사회적 풍토 마련을 위해 도서우편물 발송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체신당국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최태원 기자